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이규엽**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장  
kylee@kiep.go.kr

**이천기**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장  
leeck@kiep.go.kr

**최원석** 경제안보전략실 경제안보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엄준현**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전문연구원  
jheom@kiep.go.kr

**황운중**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uwchang2@gmail.com



##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현재 위치와 정책 목표
3. 협정문 수준과 내용
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5. 규제와 제도 정비
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

## 주요 내용

- ▶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구성요소와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
  -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에 초점을 맞추고 문헌조사, 통계분석, 실증분석,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분석, 협정문 분석, 디지털 무역 현안 점검, 법률(안) 검토, 국내규제 개선점 점검 등 정량·정성 평가를 포함한 종합 분석을 수행
  - 이 보고서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는 정부가 제시한 과제인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 수립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서 쓰임새가 있음.
- ▶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구성요소 예시

구분	구성요소
한국의 현재 위치	·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
정책 목표와 방향	·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목표와 방향 · 단기-중기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책 목표와 방향
협정문 내용과 수준	· 협정문의 주요 내용: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 · 협정문 수준: 상대국의 상황 고려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 선정 기준: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성, 규제 동질성 등 · 우선 협상상대국 순위: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예시 제공
규제와 제도 정비	· 규제 정비 노력: 당면 현안, 미래 현안 · 국내 보완대책 수립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	· 기대 효과: 정량 분석(일반 균형 분석, 네트워크 영향력 분석), 정성 분석(기업과 소비자 대상 설문) · 국민 참여: 기업 의견 수렴과 대국민 홍보 강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정 과제 목표와 주요 내용이 2022년 7월에 발표됨.
  - 국정 과제의 목표: (i) 지역별 맞춤형 통상협력 강화 (ii) IPEF, CPTPP, RCEP 등 역내 통상규범 주도 (iii) 디지털 통상 선도를 통해 인태 통상 중추국으로서 도약
  - 국정 과제의 주요 내용: (1)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2)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적극 참여, 지역별 특화 통상협력 고도화, 신규 FTA 협상(태평양동맹 가입, 한·백 FTA, 한·메르코수르, 한·GCC 등) 등 추진 (3) IPEF 긍정 검토, CPTPP 가입 추진, 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역할 수행
  -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정 과제 목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를 제외하면 국정 과제의 주요 내용 대부분은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에 포함됨.
    - 국정 과제 목표 재검토 필요: 첫째, 국정 과제의 첫 번째 목표인 (i)는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 수단임; 둘째, 통상규범을 ‘주도’하는 것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규칙을 만드는 역할(rule-setter)이고, 중추국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규칙을 촉진하는 역할(rule promoter)이므로 (ii)와 (iii)이 서로 충돌
    -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은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정 과제의 주요 내용 (2)와 (3)으로 제시된 대부분(WTO 전자상거래 협상 적극 참여 제외)을 포괄함.
-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 수행
  - 디지털 무역협정에 초점을 맞추고 문헌조사, 통계분석, 실증분석,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분석, 협정문 분석, 디지털 무역 현안 점검, 법률(안) 검토, 국내규제 개선점 점검 등 정량·정성 평가를 포함한 종합 분석을 수행
    -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관한 최초의 연구를 포함하며 디지털 통상정책의 적극성과 선제성 차원에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과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를 정책 과제로 제안하고, 비전과 정책 방향 차원에서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로드맵 수립을 제안한 이규엽 외(2021)와 보완적
  - 이 보고서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는 정부가 제시한 과제인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 수립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서 쓰임새가 있음.
-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구성요소와 정부의 정책 과제
  -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 수립이라는 정책 과제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

의 완결성을 높이고 가능한 범위에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낮추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리는 것

● 이 보고서의 정책 제언

-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수립하고 향후 보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문의 내용과 수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국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방법과 시간 계획,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정량·정성 기대 효과 등이 포함될 필요

● [참고] 이 보고서에서 설정한 디지털 무역협정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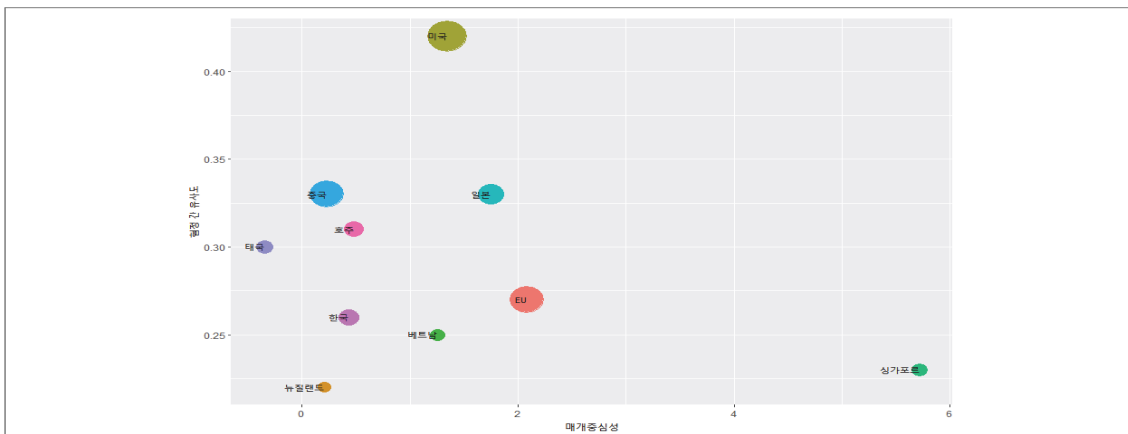
- 첫째, 디지털 무역만을 대상으로 협상한 결과인 디지털 무역협정, 둘째, 기존 무역협정의 디지털 무역장을 최신화하는 무역협정, 셋째, FTA가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provision)이나 장(chapter)을 포함하면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간주

## 2. 한국의 현재 위치와 정책 목표

●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은 중위권

- 매개 중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과 협정문의 유사도 결과를 GDP 규모와 함께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임(아래 그림은 보고서 3장, 4장의 결과를 종합한 평가 예시임).

〈글로벌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현 위치: 예시〉



주: 각 국가의 크기는 경제 규모에 비례.  
 자료: 본문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중장기] 개방(openness)과 규칙 기반(rule-based)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통상정책을 펼치고 디지털 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
  - 개방은 디지털 무역시장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것
  - 규칙 기반은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 통상규범과 이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함.
  
- [단기-중기] 정책 목표는 디지털 무역 증추국 도약으로 설정
  - [한국의 역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의 촉진자(rule-promoter)가 되길 제안
    - 단기-중기에 한국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디지털 무역시장이나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해당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됨.
  - [정책 방향] 단기-중기 정책 방향은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을 반드시 참고할 필요

### 3. 협정문 수준과 내용

- [협정문 수준] 단기-중기에 디지털 무역 관련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정문의 수준을 달리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template)을 작성하길 제안
  - [장점 1] 국내 디지털 무역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의 이익이 큼.
  - [장점 2]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음.<sup>1)</sup>
  - [단점] 기업 의견 수렴부터 시작해서 협정문안 작성에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상법적 고려사항이 많음(4장 분석 참고).
  
- [협정문 내용]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요인을 완화(mitigating)하거나 해소(solving)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함.
  - [통상법적 검토] 디지털 통상 로드맵 구축에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통상법 측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4장 참고)

1) 이규엽 외(2021), p. 296.

- [설문 자료] 202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02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2020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 등 참고
  - [주요 결과]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 역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며, WTO나 FTA 차원에서 논의되는 전자서명과 인증, 전자지급, 데이터 이동, 데이터 지역화, 소스코드 등 다양한 이슈가 해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님.
  - [제언] 국내 기업만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이 무엇인지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 [협력 조항 확대] 교역상대국의 협상 의지를 제고하고 양국·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DEPA 협정문은 좋은 참고자료가 되나 주요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더 찾기 위한 노력 역시 요구됨.

#### 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등을 제안
  -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순
  -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성장률 상위 20개국: 호주, 인도, 필리핀, 체코, 브라질,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홍콩, 이스라엘, 덴마크,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태국, 대만, 튀르키예, 폴란드 순
  - 한국과 양자 간 규제 유사성이 높은 상위 20개국: 캐나다, 영국, 에스토니아, 가나, 멕시코, 호주, 우크라이나, 칠레, 아랍에미리트, 중국,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몰도바, 인도네시아, 페루,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순

선정 기준	판단 근거 예시	비고
수출 확대 가능성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	2장 1절
성장 잠재성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성장률 상위 20개국	2장 2절
규제 유사성	세계은행의 DBI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양자간 규제 이질성 지수	2장 3절
현실 가능성	상대국의 관심(환경: 정치 불안정성, 코로나19 상황, 전쟁 등)	-

자료: 저자 작성.

- [우선 협상상대국] IPEF 협상,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 최신화,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순으로 우선 협상상대국과 협상 방식 선정 가능(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작성)

순위	협상상대국과 추진 방식	기간
1	IPEF 협상 -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인도(필라 1 미참여)	2023년 말까지
2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 장 최신화 - 영국: 한·영 FTA(최근 개정 협상 진행 중) - 홍콩, 중국: 한·중 FTA(2단계 서비스·투자 협상 진행 중) - 스위스, 노르웨이: 한·EFTA FTA -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한·EU DPA - 캐나다: 한·캐나다 FTA - 인도: 한·인도 CEPA - 브라질: 한·메르코수르 TA(협상 중) - 러시아: 한·러 FTA, 전쟁 종료 후	2023~26년
3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성,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 종합 고려	2024-26년

자료: 저자 작성.

## 5. 규제와 제도 정비

-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시 규제와 제도 정비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규제 정비]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정비와 연계(5장 참고)
  - [당면 현안]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당면 현안과 관련하여 타 국가와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규제를 도입할 때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디지털 무역규범과 국내 규제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
  - [미래 현안]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무역 현안(예, 크롤링 행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국내 보완대책] 디지털 무역협정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국내 보완대책 차원에서 정책 지원을 고안할 필요성이 큼.
  -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총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2장 분석 결과 참고)
  - 전통 무역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사업자는 25억 원 미만 수출법인이 90%를 넘고, 2억 원 미만 전자상거래 개인사업자는 80%에 달함.



## 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

- [기대 효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의 정량 분석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와 정성 분석을 통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업과 소비자에 설명
  - [정량 분석] 일반 균형 모델을 통해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가와 소비자의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 이외에 이 보고서에서 수행한 디지털 무역협정의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거나 텍스트 유사도 분석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 변화를 계산해 보는 것도 유용
    -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 규모 변화, 기업의 해외 진출 실적 변화, 투자 실적 변화 등 통계적 분석을 보완적으로 사용
  - [정성 분석]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이 얼마나 완화되거나 해소되었는지 체감도에 대한 응답을 기업 설문문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 설문문을 통해 디지털 무역협정에 관한 인식도 변화를 보완적으로 파악
- [국민 참여] 디지털 무역협정의 기대 효과는 국민 참여와 긴밀히 연결되므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 의견 수렴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
  -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 디지털 무역협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정문안에 담긴 내용과 의의를 공유함으로써 디지털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에 정책 신호(policy signal) 제공
  - 디지털 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준수 의무를 상기하고, 그에 따른 준비 시간을 준다는 의미도 동시에 지님. **KIEP**